



보 도 참 고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 후 즉시 사용	배포 일시	2022. 11. 25.(금)		
담당 부서	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	책임자	과장	오진희	(044-202-3120)
		담당자	서무관	김지나	(044-202-3123)

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 재발 방지 위해 ‘복지 사각지대 발굴·지원 체계 개선 대책’ 차질없이 이행

- 관련 법률(사회보장급여법)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추진 -

□ 정부는 서대문구 모녀* 사망 사건(2022년 11월 23일)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

* 건강보험료, 통신비 등 체납으로 생활고를 겪던 서대문구 거주(주민등록 주소지 : 광진구) 모녀가 사망한 후 집주인이 발견(2022년 11월 23일)

○ 돌아가신 모녀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위기정보가 입수되었고, 발굴 대상자로 선정*, 지자체에 통보되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였으나,

* (입수 위기정보) 2022년 7월 기준, 건강보험료(14개월), 통신비(6개월), 금융연체(7개월)

-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, 연락처 정보가 없어 추가적인 조사와 상담 등 후속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.

□ 2022년 11월 24일 발표한 ‘복지 사각지대 발굴·지원체계 개선 대책’에도 이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연락처 연계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○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연락처 연계 등 관련 법률(사회보장급여법)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다른 대책들도 관계 부처·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<붙임> ‘복지사각지대 발굴·지원 체계 개선 대책’ (11.24)

붙임

‘복지 사각지대 발굴 · 지원체계 개선 대책’ (11.24)

1 추진배경

□ 現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위기 사례* 발생

* (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, '22.8.21) 질병·채무로 생활고, 지자체의 가정방문 시 주민등록지-실거주지 불일치, 연락처가 없어 상담·지원 불가

□ 고독사, 취약청년* 등 新 복지 사각지대** 발굴·지원 필요성 증가

* 자립준비청년, 가족돌봄청년, 고립·은둔청년 등

** 전통적 복지대상(노인·장애인·아동 등)은 아니나 경제·인구·사회구조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복지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

☞ **사각지대 발굴 · 지원 절차별 문제점을 진단하여, 대책 수립 필요**

◆ (대통령 말씀) “중앙정부에서 이분들을 잘 찾아서 행길 시스템을 만들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... 특단의 대책 필요”

2 추진방향

목표

모두가 행복한,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

전략

◆ **정확한 발굴로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**

◆ **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및 적극 지원**

추진 과제

정확한 위기가구 발굴

- ▶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및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고도화
- ▶ 지자체 인력운용 개선 및 발굴역량 강화
- ▶ 지역 기반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
- ▶ ‘전국민 복지위기 알림·신고체계’ 구축 및 대국민 홍보

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

- ▶ 위기가구 연락처 정보연계 및 신속한 소재 파악
- ▶ 복지멤버십 및 민간기관 신청지원 확대로 위기가구 예방
- ▶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
- ▶ 발굴 후 공공-민간자원 연계 강화

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·지원

- ▶ 고독사 예방·관리체계 구축
- ▶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전·후 자립지원 강화
- ▶ 新 취약청년(가족돌봄청년, 고립은둔청년) 발굴·지원체계 마련
- ▶ 청년 지원정책 정보 통합 제공 및 정책 소통 강화

2 추진과제

신규: 신규추진과제 법령: 법령개정과제

1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

①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및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고도화

- (위기정보) 질병·채무·고용·채납 위기정보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입수 확대('23.下) **신규 법령(사회보장급여법령)**
- * ('22. : 34종) 단전·단수·건보료 채납 등 18개 기관 34종 위기정보
 - ('22.11 : 39종) 중증질환 산정특례,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, 장기요양등급, 맞춤형 급여 신청, 주민등록 세대원
 - ('23.下 : 44종)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, 채무조정 중지(실효)자 정보, 고용위기(고용단절, 실업) 정보, 수도·가스요금채납 정보
- (발굴모형)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 제고 위한 발굴모형 고도화 **신규**
- * 개인이 아닌 세대단위 위기 고려('22.11), 의료·채무 등 주요변수 가중치 제고('23.下), 생애주기·지역별 특성 고려('24)
- (지자체 지원) 지역특성 고려한 지자체 자체 발굴 지원('22.12), 위기정보 입수주기 단축(2개월→1개월)

② 지자체 복지인력 운용 개선 및 발굴 역량 강화

-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환경·과업·인력 등 실태조사('22.12) 거쳐 합리적 인력 운용 방안 마련*('23.12), 공공·민간 교육 강화('23.1~)
- * 행안부 「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」에서 복지·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읍면동 조직·인력 등 전달체계 개선 방안 마련 추진('22.12~)

③ 지역 기반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

- (의료사회복지사) 병원 활용 위기가구 발굴 위해 수가 개발* 및 건정심 심의·의결 후 시범사업('23.下~), 배치확대 기준마련('23.下)
- * '의료사회복지사 등 민간인력 활용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방안' 연구용역 추진('22.11~'23.6)
- (인적안전망) 집배원, 좋은이웃들,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기반 위기가구 발굴 활동 지원 및 운영 내실화('22.12~)

④ '전국민 복지위기 알림·신고체계' 구축 **신규** 및 대국민 홍보

- 위치정보 기반 모바일 앱 통해 본인, 이웃, 지역 인적안전망의 '위기 발견 → 빠른 신고 → 체계적 관리' 체계 구축('24.下)

②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

① 위기가구 연락처 정보연계 및 신속한 소재 파악

- (소재파악)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주민등록지-실거주지 불일치자 발굴
- (정보연계) 행안부, 통신사가 보유한 연락처 등 정보연계(~'23.12)
신규 법령(사회보장급여법령, 주민등록법 시행령)
- (강제개문) 긴급 시 경찰·소방 협조를 통해 신속히 강제개문

② 복지멤버십 확대 및 민간기관 신청지원 확대로 위기가구 예방^{신규}

- * 복지멤버십 전국민 가입 유도('22.9~) 및 안내 대상 복지서비스('22.9. 76개) 확대('22.12~)
- ** 7종 급여(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), 32개 기관(복지관, 의료기관 등) 시범사업('23.1~)

③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

- '23년 기준중위소득 최고수준(5.47%) 인상,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% 목표로 단계적 상향 추진, 재산기준 완화('23.上~)

④ 발굴 후 공공·민간자원 연계 강화

-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^{*신규} 및 통합사례관리 후 자원^{**}연계 강화
* 전입 미신고자 실거주지에서 지원 ** 공적급여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마켓 등 민간자원 포함
- 경제문제를 가진 자살 위험군 대상 정신건강·금융지원 간 연계, 취약계층 근로능력평가 간소화^{*}(~'22.12) 및 자활근로 우선 배치
* 평가 중 긴급복지지원 허용,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

③ 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

① 위기가구 고독사 예방·관리체계 구축

-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('23~'27) 수립(~'22.12), 시범사업 추진(~'23.12), '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'^{*} 구축^{신규} 법령(고독사예방법)(~'25)
* 시스템으로 체계적인 고독사 사망사건 상황보고 체계 구축, 복지 사각지대 중대사건 심층 분석

②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전·후 자립지원 강화^{신규}

③ 新 취약청년(가족돌봄청년, 고립·은둔청년) 발굴·지원체계 마련

- (가족돌봄청년)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실시('23~)^{신규}
- (고립·은둔청년) 고립·은둔 정의 개발('22.6~), 실태조사, 지원모형 개발('23~)^{신규}

④ 청년 지원정책 정보 통합제공 및 정책 소통 강화